

시론

5·18은 지금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가?



김 선 기 남도인문학연구원장·문학박사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름을 부르며 산다. 어떤 이름은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어떤 이름은 잠시 머뭇거리게 만든다. 쉽게 불러도 되는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이 있다. 5·18은 그 경계에 서 있는 이름이다. 그것은 하나의 날짜이면서, 동시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시간의 깊이를 품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름을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호출한다. 기념식의 문장 속에서, 연설의 수사 속에서, 때로는 논쟁의 근거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이용된다. 5·18은 정의를 상징하는 말이 되고,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며, 누군가의 입장과 태도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쓰인다. 이렇게 반복되는 호출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지금 이 사회에서 5·18은 과연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5·18은 오랫동안 정의의 이름으로 자리해 왔다.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 공동체를 지키려는 연대의 기억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근거가 됐다. 이 점에서 5·18은 하나의 윤리적 기준이자,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상징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기억은 질문을 멈추게 된다. 너무나 옳은 말이 되어버린 기억은 더는 사유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5·18은 정치적 언어로도 끊임없이 호출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름은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창이 된다. 기억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수단으로 이동한다. 이때 5·18은 해석 가능한 자원이 된다. 말해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지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한다.

그러나 5·18은 본래 그렇게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몸의 감각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광주의 거리와 골목, 이름 없는 이들의 삶과 죽음이 겹쳐진 자리였다. 그 구체성은 쉽게 환원될 수 없는 것이었고, 바로 그 점에서 5·18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그 무엇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 낯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에 있다. 기념이 반복될수록 기억은 안정되고, 안정된 기억은 우리를 흔들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을 보존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일정한 형식 안에 그것을 가두고 있

는지도 모른다. 기억이 널리 공유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사라질 때 오히려 약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5·18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기억은 균등하게 소용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삶의 일부였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배워야 할 역사다. 그 사이를 간과한 채 같은 언어로 말하는 순간, 기억은 오히려 추상으로 미끄러진다.

5·18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더 크게 말하는 일이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부르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어떤 기억은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까지 요구한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그 무게를 다시 배워야 한다.

5·18은 이미 완성된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이해하려 하는가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는 현재다. 기억은 매번 다시 불릴 때마다 새로이 살아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그 앞에서 다시 질문하는 일이다. 그 이름이 여전히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기억을 다시 낯설게 만드는 일이다.

자치칼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조 제대로 재설계해야



김 병 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출범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호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문을 새롭게 여는 역사적 과업이다. 제1조 '전년'이라는 시간적 국한을 극복하고, 5·18을 넘어 학생독립운동 등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총망라하며, 이를 헌법 전문(前文)과 같은 형식을 통해 재설계가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여정의 나침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역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1조에 기록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통합 시민이 공유할 정신적 헌법이자 정체성의 뿌리다. 시간적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라도 천년'의 프레임은 깨고 '5천 년 또는 유구한 역사'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조문은 1018년 고려 현종 당시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호남은 그 이전부터 마한과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한반도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전년'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자칫 우리의 역사를 11세기로 국한시킨다. 우리 역사는 천 년에 국한되지 않는 '오천 년'의 도도한 흐름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개정함으로써, 고대부터 이어져 온 호남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5·18민주화운동에 우리의 '역사적 자부심'이 집중돼 있다. 두 말할 나위없이 5·18은 우리 지역의 가장 고귀한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호남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수많은 의로운 투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吾國矣假)"는 정신으로 일어난 의병항쟁, 구한말의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일제강점기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광주학생독립운동'도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한 사건만을 명시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의 근간이 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거나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도민이 기억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화합의 장치가 될 것이다.

필요시 헌법 전문(前文)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만약 5·18이나 학생독립운동 등 특정 사건을 법전에 새겨 항구적인 자부심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기존 법률형식을 탈피해 우리 헌법 전문과 같은 형식을 특별

법 도입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듯, 특별법 또한 호남의 의로운 역사를 서술하는 별도의 '서문' 혹은 '전문'을 두어 그 숭고한 정신을 명문화 하면 된다.

제1조(목적)에는 행정적·경제적 지향점을 명확히 담고, 그 근간이 되는 정신적 토양은 전문을 통해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훨씬 짜임새 있고 품격 있는 구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미래 산업의 유연한 수용과 국가적 소명 또한, 법안에 명시된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의 특정 산업 명칭도 재고해야 한다. 기술의 주기는 법의 생명보다 짧다. 특정 산업을 법 조항에 박제하기보다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이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미래 산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합은 단순히 두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학적 결합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 특별법 제1조를 읽으며 "나는 유구한 역사의 의로운 고장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미래가 밝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해야 한다. 모든 문장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속도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특별법의 완결을 위해 기초부터 하나씩 고쳐서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합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우리의 의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봄철 산불, 작은 불씨가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대부분의 산불은 자연발화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담배꽂초 투기, 논·밭두렁 소각, 취사 행위 등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지 않음'이 중요하다.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나 휴연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농산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지킨다.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초기의 작은 불이라면 흙이나 옷 등으로 덮어 진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불길이 커질 경우에는 무리한 진화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하다. 싱그러움 봄철, 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성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보다 중요하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하다. 싱그러움 봄철, 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성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5·18 헌법 수록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해온 대한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39년 만에 만들어진 기회였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용 접근해 부분적 개헌을 추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다음날에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행위 방해)를 예고해 재상정이 불발됐다.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막았다. 반역사적 폭거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다. 여야 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했으나 정략적 가교로 막았다. 5·18기념재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5·18을 헌법에 새기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반면 필요하다는 67.3%였으며, 이 가운데 47.4%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법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3내란과 같은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차원이다. 민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담는 것이었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들을 옹호세력으로 규정해야 하

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선거용 졸속'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발목을 잡았다.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광주·전남 시·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했다. 간절한 염원이 목살됐다. 각계에서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5·18단체 등 200여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자 낡은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라고 질책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소한의 개헌안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국민의힘은 한국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18정신은 단순한 지역적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다. 역시 군사독재를 물리친 부마항쟁도 같이 수록하고자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정치권도 헌법 개정을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제 모든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 더 큰 민주주의의 위를 위해 심판해야 한다. 연대해야 한다.

다시 원점... 광주 쓰레기 소각장 정말 대안없나

광주지검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곳(54%)이 찬성하면서 최소 신청 자격 요건 50%를 갖추게 됐다.

중대한 하자가 검경 수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무효가 불가피하고 후속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48세대 중 12곳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36세대만 동의해 40%에 그치는 셈이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가등을 소각장 후보지로 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 중단했다. 문제는 제공모에 들어간다고 해도 2000년 직매입 금지법정 시한 내 완공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계획상으로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와 착공 일정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다. 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부 및 자치구와 협력은 물론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행정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번에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실패이자 환경 위기 대응의 구조적 공백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역 연계 처리, 민간 위탁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다. 광주시는 최대한 기간을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법까지 내부 검토하는 모습이야. 현재 가연성폐기물열화소(SRF) 운영이 2031년까지로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번번히 가로막힌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대로면 민선9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점으로 넘어간다. 시정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하룻길」 - 정우영

사위가 어둡어둡해질 무렵 용기 아버지가 거적때기에 땀을 뚫고 밭에 바작에 지고 귀신 나온다는 판소릿소리까지 들려왔다. 먼 소재지에서 만화책 뒤적거리다 헤맬만 나는 희끗한 그가 너무도 반가웠으므로 발랄하게 물었다.

뒤야지 풀러 가시는데? 용기 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 저물었는지 얼렁 들어가라. 가뿐해 보이는 지게 뿔뿔을 거머쥔 채 휘저거렸다. 용기네 막둥이가 숨 났다는 소문이 며칠 동네를 떠돌다 닳달처럼 가라앉았다. 그뿐이었다.

내가 용기 아버지 나이쯤 되어서야 그 황망한날의 숙움음이 차올랐다.

- 출처 : 『순한 먼지들의 책방』, 창비, 2024.

*사정을 가늠하지 못한 말이 잦은 시절이었다. 그때 쓴은 말들이 명물로 쌓이고 맺혀다

리를 이루고, 다리를 건너다 잠시 선 때까 지금 인걸 생각하면 아득하고 부끄럽다.

속을 살피지 못한 말은 마음을 깨뜨리고, 늦게라도 찾아올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사면이 날카로운 사슴과리가 되어 바닥을 굴러다닌다. 더러 반짝거리기도 하지만, 별은 아니다.

'망가'이나 '외면' 같은 대패로 날카로운 면들이 매끄러워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뻔뻔하게 버릴 수 없다면 '죄책감'도 그리 나쁜 처방은 아니다.

그런 처방이 필요한 나이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빨리 처방받을수록 좋은 약일지 모르니까. 자신에게 독한 것이 타인에게는 명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천세신 시인·비평가/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